【헌 법 25문】

【문 1】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전국수렵인총연합회는 엽총을 소지하는 자로 하여금 수렵기간을 제외하고 이를 관할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관련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가진다.

② 연명치료 중인 환자의 자녀들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

③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에 있어서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등에는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

【문 2】 정당제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②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외에도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고 있다.

③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적 결사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기 어렵고, 다만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경비를 보조한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의회제도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인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그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다.

【문 3】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의견이 5인, 헌법불합치의견이 2인인 경우 주문의 표시에 단순위헌결정을 하고 있다.

② 한정합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그 법률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그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되는 의미를 배제시키고 합헌적인 내용으로 축소·한정하여 해석하여 그 의미로서만 해당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게 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한정합헌결정은 합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제청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 한다.

③ 한정합헌과 한정위헌은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④ 한정위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의미 부분만을 해당 법률의 의미에서 제거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 부적절하지만, 다만 그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로 선해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적법하다.

【문 4】 국방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법무사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의 공무원 근무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③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④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2항과 관련이 없다.

【문 5】 다음 중 법원에 속하는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선거소송심판권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주무부장관이 취소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소송

③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다툼

④ 재판의 전제가 되는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문 6】 근로의 권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가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국가는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법률로 국가보조연구기관을 통폐합함에 있어 재산상의 권리·의무만 승계시키고, 근로관계의 당연승계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다.

②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 3권)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헌법 조항으로부터 국가의 조세법규범 정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④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조항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상 한계를 넘어 업무방해의 결과를 야기시키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 7】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척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권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은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에서보다는 급부행정법규에서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평등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의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8】 평등원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비례의 원칙에 의한 평등심사는 문제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에 하는 심사방식으로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는 심사방식이다.
②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③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차별취급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
④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문 9】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이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이 그 공개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공개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및 그 가처분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문10】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도 당연히 소급효가 인정된다.
②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라도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③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위헌제청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법률은 당해사건에서만 그 적용이 배제된다.
④ 위헌결정된 법률에 의하여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문11】 다음 중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 또는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행정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직원대표로 입후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
②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조한 음료수를 전량 수출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것
③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의 하나로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
④ 대한궁도협회가 궁도경기용품인 궁시(弓矢)에 대한 검정 및 공인제도를 실시하면서 각궁(角弓)에 대한 공인요건으로 최고가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것

【문12】 다음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정이 없다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구제조치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기는 하더라도 그 기관이 갖는 권한의 침해 여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은 없다.
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면 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라

【문13】 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년은 70세이다.
③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 및 평의는 공개한다.

【문14】 헌법상의 국제질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②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근거한 민사면책특권 때문에 채무자인 외국대사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 경우 채권자인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비록 그 내용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에 해당한다.

④ 우리 헌법상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외에 외국인이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문15】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문언상 명백하지 않고 반대해석으로만 그 규정의 입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에도 진정 입법부작위로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문16】 대통령과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대통령은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②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해제요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어야 한다.

④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법률안을 법률로서 확정할 수 있다.

【문17】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로써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병합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자율적으로 지방의 고유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고유사무에 관해서는 국가적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의 권능에는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외에도 자치사법권이 포함된다.

④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 및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

【문18】 헌법 제31조의 교육조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제31조 제3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효력규정으로서, 이로부터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초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②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는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학교교육에 있어서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선한다.

④ 교원지위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대학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19】 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더라도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한 동행계호행위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하면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④ 검사조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포승으로 팔과 상반신을 묶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20】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의 해석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①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누진율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안기는 법률조항은 혼인한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조항으로서 허용되지 아니 한다.

②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이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에서의 전통을 근거로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이 강제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④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혼에 대해 그 취소청구권자로 직계비속을 포함하지 않은 법률 조항은 혼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취지이므로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21】 다음 중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개인의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양심의 자유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까지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이 강제로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선악에 대한 윤리적 결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문22】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란 그 침해로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 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데 이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②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③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될 수 없는 분야이므로 어느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법정형을 정한 법률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④ 입법자가 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문23】 선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이다.
③ 대통령의 선거기간은 23일이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④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하더라도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문24】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구치소의 미결수용자가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②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만이 포함될 뿐,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④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문25】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② 다수설에 의하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 한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헌법의 각 개별조항 간에는 이념적·논리적으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헌법조항은 다른 헌법조항이 개정될 경우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④ 제1공화국의 1954년 개정헌법에서는 국민주권주의, 민주공화국,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다.

【국 어 25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 ~ 문 3】

그러한 오봉 선생이 되고 보니, 왜놈들이나 그들의 앞잡이들의 비위에 맞을 리가 없었다. 게다가 소위 합방 이후 낙동강 연안의 그 질펀한 갈밭들이 모조리 동척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이내 그들의 논밭이 되어가는 꼴을 보고는, 당신은 당신대로 더욱 참을 수가 없는 듯이, 툭하면 구두덜거리며 어디론지 핑 떠나기가 일쑤였다. 그러자니 사실 살림이라고는 깍듯이 돌아볼 경황도 생각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집안 식구들도 자연 그렇게 된 어른에게 기댈 도리가 없어지고 도리어 세상을 등진 듯 새침하게 세월을 보내는 그의 비위나 거스를까 조마조마할 따름이었다.

A【 "우짜다가 화를 내실 때는 꼭 벼락이라도 떨어지는 것 같디이라. 목소리나 비미이(예사로) 킂나! '못난 것들!' 하고 호통을 치실 때는 그저 온 집이 쩌렁쩌렁 울리디이라."】

할머니는 이런 표현을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운 반면 자기에게는 이를 수 없이 고마운 시아버님이었다는 말도 잊지는 않았다.

"야아, 춥다, 어서 방에 들어가거라. 와 부엌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지 않고서……. "

저녁 일이 늦을 때는 이렇게 나무람 겸 위로를 해 주시더란 것이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가벼운 한숨을 쉬곤 하였다고 한다.

B【그러나 그렇다고 며느리 가야 댁은 일을 덜 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만 해도 웬만한 가문의 부녀자들은 비록 굶는 한이 있더라도 손끝 하나 꼼짝하지 않는 것을 무슨 자랑처럼 여기었지만, 그녀는 타고난 천성이 그러질 못했다. 집안 형편을 따라서 진일 마른일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해내었다. 일을 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긴다거나 꺼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일찍 배우지 못한 일이라도 이내 손에 익숙해졌다. 머슴이나 부엌 식구들이 도리어 송구스럽게 여길 정도로 부지런했다. 벌써 그녀는 한다한 양반의 집 맏며느리가 아니라, 흔해 빠진 농사꾼의 마누라처럼 되어 갔다.】

남편인 명호 양반은 그저 미안스런 눈치만 보였다. 그는 소위 양반의 집 맏아들로서 층층시하에 눌려 살아온 처지라, 대소사를 막론하고 어른들의 눈치나 살필 일이지, 이러쿵저러쿵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사실 그는 부인 가야댁보다 나이도 두어 살 아래였을 뿐 아니라 이녁 할아버지나 아버지 오봉 선생에 비하면, 위인이 그저 순하기만 했지, 아직은 무슨 일을 이래라저래라 할 처지가 못 되었다.

시아버지 오봉 선생이 멀리 출타를 할 때는 마누라보다 자부인 가야 부인을 꼭 불렀다.

"야아, 내 옷 좀 챙겨 오너라. 여분이 한 불쯤 더 있었음 좋겠다."

애당초 어디로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언제 돌아오겠다는 말도, 누가 따르기는커녕, 배웅도 멀리 못 나오게 했다.

"아부이 잘 다녀오이소."

대문 밖에서 그저 이럴라치면

"오냐, 집 잘 지켜라."

하고는 돌아도 안 보고 휭 떠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가 안 계시면 가야 부인이 실제 주인 구실을 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명호 양반은 아직 글만 읽는 서생인 데다 시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워낙 눌려서만 살아오던 분이 돼서 매사에 자기의 의견이라고는 내세우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의향을 물으면,

"내가 머 아나. 니가 알아서 해라."

고작 이런 투였다.(중략)

이런 꼴로 가야 부인의 시댁뿐 아니라 부락 자제들도 아직 신통한 해방 덕을 못 보았다. 첫째, 징용을 끌려간 사람들이 제대로 돌아오질 않았다. 어쩌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거지가 되어 오거나 병신이 되어 왔다. 더구나 '여자 정신대'에 나간 처녀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 '설마?' 하고 기다리는 판이었다. 그래서 부락들은 역시 걱정에 싸여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한편 불행하리라 믿었던 이와모도 참봉의 집은 반대로 활짝 꽃이 피었다. 고등계 경보부로 있었던 맏아들은 해방 직후에 코끝도 안 보이고 어디에 숨어 있느니 어쩌느니 하는 소문만 떠돌더니, 뜻밖에 다시 경찰 간부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고 몇 해 뒤엔 어마어마하게도 국회 의원으로 뽑혔다.

명호 양반은 아버지 오봉 선생을 닮아서 다시 두문불출을 하다시피 구겨지고, 아들 가운데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던 막내도 결국 반거충이가 되어 어딜 돌아다니기만 했다.

"애닯기도 하제. 즈그 할배나 징조할배가 그렇기 훌륭하고 독립운동도 많이 했다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들 안타까워했다. 양 접장이 살아 있었더람 뭐라고 할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궁금하게 여겼다. 가야 부인의 머리에 흰털이 부쩍 늘어난 것도 이 막내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가야 부인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땐 돌아가신 시어머니처럼 천수나 치고 미륵당에 나가면 미륵불 앞에 앉아서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곧잘 자줏빛 모란꽃잎이 뚝뚝 떨어지곤 하였다.

"석이 안 왔나?"

C【가야 부인은 겨우 눈을 뜨고 또 뜨곤 막내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멀리서 또 포성이 쿵 울려 왔다. 왜 사람들은 싸우지 않음 안 될까? 가야 부인은 무슨 말이라도 할 듯이 입을 약간 우물하다 만다. 이마에서 잇달아 솟는 땀이 드디어 그녀의 최후를 알리는 것 같았다. 】

-김정한, '수라도(修羅道)'

【문 1】A ~ C의 【 】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는 보여주기 방식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② B는 특정 인물의 삶을 요약적으로 설명하듯이 진술하고 있다.
③ B는 말하기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C는 사건 전개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고 있다.

【문 2】위 글을 감상할 때 작품의 내재적인 면에 주목하여 감상한 것은?

① 사투리를 사용하여 등장인물에 생생함을 부여하고 있다.
② 두 집안의 흥망성쇠를 대조하여 해방 직후의 사회상을 표현하고 있다.
③ 격동의 역사를 살아온 인물의 생애를 통해 참다운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④ 주인공의 비극적 죽음을 통해 민족사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문 3】밑줄 친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죽음의 공포 ② 소망의 좌절
③ 새로운 희망 ④ 실연의 아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4 ~ 문 6】

생명 가치는 너무도 기본적인 것이어서 '이념적 가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살아가려는 의지, 즉 '의지적 가치'의 형태로 모든 생명체들의 본능 속에 깊이 부각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유정성을 지닌 모든 동물들에게 외형적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특히 인간의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의식하고 있으며 이렇게 의식된 내용이 바로 자신의 생명 가치관을 이루는 선천적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점은 이러한 생명 가치관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자기 삶의 주체가 일차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단위로 하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인데, 이 점 또한 본능에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생명에 대한 이러한 소중함의 관념이 자기 자신의 생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생명은 설혹 자신의 생명만큼 소중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어떠한 합리적 사변(㉡)에 의해 도달하는 관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인 것이다. 그러나 느낌만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사람의 생명 가치를 동등한 가치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 주위의 사람들의 생명 가치에 대한 일정한 차별이 나타나게 된다. 자신에게 자기 부모의 생명이 상대적으로 더 소중하게 느껴짐을 아무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는 온당한 판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대등하게 태어난 인간이라 할 때 내 생명 또는 내게 가까운 사람의 생명만 소중하고 남의 생명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할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사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같은 정도로 소중하다는 이 대원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기까지는 오랜 역사적 과정이 소요되었다. 이는 우리의 느낌 속에 부각된 인간 생명 가치의 차별성과 합리적 사고가 말해 주는 동등성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겨 내려는 의식적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반영하는 사회적 장치가 바로 윤리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남의 생명의 소중함이 자기 생명의 소중함과 원칙적으로 같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윤리의 바탕에 깔린 기본 윤리가 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일러 '황금률'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원칙적으로' 같다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들의 소중함에 대한 상대적 차이를 심정적인 면에서까지 완전히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의 입장에 서면 그가 느끼는 바와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해'를 지니고 이 이해가 공유되는 바탕 위에 모든 사회의 행위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윤리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 가치에 대한 이러한 고찰(㉣)이 인간이 아닌 여타의 생물이 지닌 생명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물과 식물, 박테리아의 생명까지를 모두 인간의 생명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생각할 것인지 혹은 이들의 생명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낮다면 얼마나 낮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하는 데에 이르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까지 윤리학자들의 한가한 이론적 과제로만 치부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우리에게 인간 사회 안에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가]

【문 4】 ㉠ ~ ㉣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 : 刻印 ② ㉡ : 事變 ③ ㉢ : 間隙 ④ ㉣ : 考察

【문 5】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모든 생명체는 후천적으로 생명에 대한 의지적 가치를 갖게 된다.
② 나에게 가까운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다.
③ 모든 사람의 생명 가치가 같다는 생각은 고대부터 보편적으로 인정되었다.
④ 모든 인간의 생명이 동등하다는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 6】 글의 흐름상 [가]에 올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인간 이외의 생물이 지닌 생명 가치가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
② 모든 사람이 갖는 천부 인권이 침해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③ 인간의 생명과 동등하게 생명의 가치를 인정해야 할 생물들을 보호하는 방법
④ 인류의 번영을 위해 인간에게 해가 되는 생명체들을 없애는 방법

【문 7】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① 국민들의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어 시위가 일어났다.
② 사람들은 생존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동하는 존재입니다.
③ 장관들의 의견은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자는 데 뜻을 모았다.
④ 두발 규정은 학생들의 토론을 거쳐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8】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지위에 따른 단어의 쓰임이 바른 문장은?
① 할아버지, 어머니께서 밥 드시래요.
② 참 오랜만이네. 자네 선친께서는 편안하신가?
③ 선생님께서 누추한 우리 집을 몸소 찾아 주셨다.
④ 선생님, 저를 가르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문 9】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은?
① 욕심이 지나쳐 좀더 큰것을 찾다가 이렇게 되어 버렸어.
② 이순신씨, 나는 당신의 학문에 대한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③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는 적지않은 경제적 부담이 요구된다.
④ 김 과장은 너무 아는 체하는 것이 탈이야. 그러니 친구들이 모두 그를 떠나가버렸지.

【문10】 다음 중 문장 구성상 호응이 자연스러운 문장은?
① 길을 다니거나 놀 때에는 차를 조심해야 합니다.
② 수철이의 어릴 때 소박한 꿈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③ 주민들은 보상 거부와 토지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④ 이 열차는 잠시 후 김천역에 도착하여 1분 동안 정차하겠습니다.

【문11】 우리말답지 않은 번역투 표현이 없어 자연스러운 문장은?
① 부서별 회의를 내일 10시에 갖도록 합시다.
②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동생으로부터 들었다.
③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께서는 축구부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④ 눈이 너무 나쁜 관계로 라섹 수술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크게 상심하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2 ~ 문13】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임금과 더불어 하늘이 준 직분을 행하는 것이니 재능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늘이 인재를 내는 것은 본디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귀한 집 자식이라고 하여 풍부하게 주고, 천한 집 자식이라 하여 인색하게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옛날의 어진 임금은 이런 것을 알고, 인재를 더러 초야(草野)에서도 구하고 더러 항복한 오랑캐 장수 중에서도 뽑았으며, 더러 도둑 중에서도 끌어 올리고, 더러 창고지기를 등용키도 했다. 이들은 다 알맞은 자리에 등용되어 재능을 한껏 펼쳤다. 나라가 복을 받고 치적(治績)이 날로 융성케 된 것은 이 방법을 썼기 때문이다.

중국같이 큰 나라도 인재를 빠뜨릴까 걱정하여 늘 그 일을 생각한다. 잠자리에서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에도 탄식(歎息)한다. 어찌하여 숲 속과 연못가에서 살면서 큰 보배를 품고도 풀지 못하는 자가 수두룩하고, 영걸 찬 인재가 하급 구실아치 속에 파묻혀서 끝내 그 포부를 펴지 못하는가? 정말, 인재를 모두 얻기도 어렵거니와, 모두 거두어 쓰기도 또한 어렵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고 인재가 드물게 나서 예부터 걱정거리였다. 더구나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인재 등용의 길이 더 좁아져서 대대로 명망 있는 집 자식이 아니면 좋은 벼슬자리를 얻지 못하고, 바위 구멍과 띠풀 지붕 밑에 사는 선비는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억울하게도 등용되지 못한다.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하고, 비록 덕이 훌륭해도 과거를 보지 않으면 재상(宰相)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하늘은 재주를 고르게 주는데 이것을 명문의 집과 과거(科擧)로써 제한하니 인재가 늘 모자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서고금에 첩이 낳은 아들의 재주를 쓰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우리나라만이 천한 어미를 가진 자손이나 두 번 시집간 자의 자손을 벼슬길에 끼지 못하게 한다.

조막만 하고 더욱이 양쪽 오랑캐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나라에서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할까 두려워해도 더러 나랏일이 제대로 될지 점칠 수 없는데, 도리어 그 길을 스스로 막고서 "우리나라에는 인재가 없다."라고 탄식한다. 이것은 ㉠ 남쪽 나라를 치러가면서 수레를 북쪽으로 내달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참으로 이웃 나라가 알까 두렵다.

한낱 여인네가 원한을 품어도 하늘이 마음이 언짢아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리는데, 하물며 원망을 품은 사내와 원한에 찬 홀어미가 나라의 반을 차지하니 화평한 기운을 불러오기는 어려우리라.

옛날에 어진 인재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많이 나왔었다. 그때에도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법을 썼다면, 범중엄(范仲淹)이 재상 때에 이룬 공업(功業)이 없었을 것이요, 진관(陣瓘)과 반양귀(潘良貴)는 곧은 신하라는 이름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며, 사마양저(司馬穰苴), 위청(衛靑)과 같은 장수와 왕부(王符)의 문장도 끝내 세상에서 쓰이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늘이 냈는데도 사람이 버리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늘을 거스르고도 하늘에 나라를 길이 유지하게 해 달라고 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하늘의 순리를 받들어 행하면 나라의 명맥(命脈)을 훌륭히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허균, '유재론(遺才論)'

【문12】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옛날의 사례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② 신분차별이라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③ 인재등용 문제를 통해 왕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④ 외국의 성공한 사례를 들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13】 다음 중 ㉠의 표현과 의미상 연결할 수 있는 한자성어(漢字成語)는?

① 자가당착(自家撞着)　② 적반하장(賊反荷杖)
③ 전차복철(前車覆轍)　④ 성동격서(聲東擊西)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4 ~ 문15】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ᄃᆞ래랑 먹고, 청산(靑山)애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이링공 더링공 ᄒᆞ야 나즈란 디내와손뎌,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ᄯᅩ 엇디 호리라.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 '청산별곡(靑山別曲)'

(나)
말 업슨 청산이요, 태(態) 업슨 유수(有數)ㅣ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이요, 님ᄌᆞ 업슨 명월(明月)이라.
㉠이중에 병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늙으리라.

- 성혼

(다)
강호(江湖)에 ᄀᆞ을이 드니 고기마다 술져 있다.
소정(小艇)에 그믈 시러 흘리 ᄠᅴ여 더뎌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히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강호(江湖)에 겨월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삿갓 빗기 ᄡᅳ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히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라)
이런ᄃᆞᆯ 엇더ᄒᆞ며 뎌런ᄃᆞᆯ 엇다ᄒᆞ료.
초야우생(草野優生)이 이러타 엇더ᄒᆞ료.
㉢ᄒᆞᄆᆞᆯ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텨 ᄆᆞ슴ᄒᆞ료.

고인(古人)도 날 몯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몯 뵈.
고인(古人)을 몯 뵈도 녀던 길 알퓌 잇닉.
㉣녀던 길 알퓌 잇거든 아니 녀고 엇뎔고.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문14】 (가) ~ (라)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중 공통적인 것은?

① 4음보의 반복
② 여음구의 반복
③ 음성상징어의 사용
④ 유사한 어구와 문장 구조의 반복

【문15】 ㉠ ~ ㉣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세속적인 근심 걱정을 잊고 살겠다는 달관의 경지를 느낄 수 있다.
② ㉡ : 자연에서도 임금을 잊지 않는 유교적 가치관이 나타나 있다.
③ ㉢ :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절실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④ ㉣ : 옛 사람을 따라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6 ~ 문17】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안'이라는 냉소적인 성격의 대학원생을 우연히 만나 포장마차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무의미한 대화를 나눈다. 낯선 사내가 말을 걸어오며 오늘 아내가 죽었다고 하면서 동행을 간청한다. '나'와 '안'은 승낙하고 같이 술을 마신다. 택시를 타고 가던 세 사람은 소방차를 따라가서 불구경을 하게 된다. 화재가 난 곳에서 사내는 아내의 시체를 판돈을 불 속에 던지고는 돌아가려는 '나'와 '안'에게 혼자 있기가 무섭다며 같이 있어 달라고 애원한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몹시 춥군요."/ 라고 사내는 우리를 염려한다는 음성으로 말했다.

"추운데요. 빨리 여관으로 갑시다." / 안이 말했다.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여관에 들어갔을 때 안이 우리에게 말했다.

"그게 좋겠지요?" / "모두 한방에 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다.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 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 더 좋았던 셈이었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아주 피곤합니다." 안이 말했다.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놉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 하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안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 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지요?"

"물론 그렇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밖의 이른 아침에는 싸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떨어져갔다.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문16】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몽환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② 인물들 간의 대립 구도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③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그려내고 있다.
④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17】 윗글의 ㉠ ~ ㉣을 현대 사회의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목표의 부재로 인한 방향 상실을 상징한다.
② ㉡은 개인주의의 표출과 연대 의식의 상실을 드러낸다.
③ ㉢은 개인의 노출을 꺼리는 현대인의 익명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은 현대인이 지닌 자아 분열과 심리적 불안정성을 상징한다.

【문18】 <보기1>은 인터넷 정책 토론방에 쓴 글이다. <보기2>의 조건에 맞게 쓴 댓글로 적절한 것은?

< 보기1 >

[논제] : 입학사정관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1] :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전의 입시 제도는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한 줄 세우기'를 하는 제도였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는 입시 교과목만을 가르치는 입시 학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과 인성을 입학 전형 자료로 삼는 '여러 줄 세우기' 방식의 입학사정관제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입학사정관제에 찬성한다.

[댓글] :

< 보기2 >

- [의견1]의 생각 일부를 인정한다.
- [의견1]의 다른 문제점을 제기한다.
- [의견1]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등학교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② 입시 위주로 흐르고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에 적합하도록 고등학교 교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고, 대학이 내신 성적 우수자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③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의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학벌과 결과 지상주의 같은 구조적 문제의 해결 없이 입시 제도의 변화만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므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면서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④ 대학 입학 제도의 잦은 변화는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 입시 교육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한 번 도입된 제도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 역시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9 ~ 문20】

몇 년 전에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면서 2015년 국민소득 3만 5,000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보기술(IT) 등 4대 기술혁신 사업화, 제조업과 인프라 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 체제 구축, 교육 및 의료 등의 산업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 우선은 이공계에 진학하려면 수학 물리학 등 배우기 어렵고 수능 점수도 올리기 힘든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빠른 과학기술의 진보로 의학이나 법학 등에 비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대학 졸업만으로는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가 쉽지 않고, 산업현장에 배치될 확률이 높아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힘들 수 있다. 이 밖에 의료나 금융 분야보다 보수가 적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나)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수 이공계 인재의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미 기업에서는 우수 이공계 출신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경영진은 물론이고 상장 제조기업의 핵심 임원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이다. 중국은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지도자의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이다. 이같이 이공계 출신이 국가 사회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청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 이러한 산업계의 바람과 달리 일선 교육현장에선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학 기피, 의약 등 특정 분야의 인재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제조업 중심의 국가 발전 토대가 흔들릴까 걱정된다. 포스텍 수석졸업생이 의대에 편입학하고 지방 의대 입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서울 명문대 이공계 입학생의 점수보다 높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주요 국립대 자퇴생의 절반 이상이 이공계 학생이며, 공대 졸업 후 취업 대신 고시촌에 몰리는 현상 등은 산업은 물론이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라)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의료 법률 등 서비스 분야의 면허제도 등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이들 분야에서 이른바 '지대 추구(rent seeking)' 행위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하고 산학 공동연구 참여자에 대한 학자금 및 생활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이공계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리더십 및 의사소통 교육, 산업현장 체험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마) 국가 차원에서는 의료나 교육 등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 인재가 이들 분야에 진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보건의료산업의 비중(2008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보건 및 의료 총지출 6.5%)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우수 인재의 특정분야 쏠림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은 산업 강국에서는 제조업이 전제되지 않은 서비스 산업 육성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산업 제품을 수출해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이들 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의료 법률 등 서비스 분야만을 키워서는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지속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청년들이 이공계 진학을 선호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학 과학 교육의 혁신과 함께 고교 때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계를 구분하여 수학 과학 교육을 차별화하는 것이 올바른지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수 이공계 인력이 양성되어 제조업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때 제조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도 살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

【문19】 위 글에서 (가) ~ (마)를 논지 전개에 맞게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다)-(마)-(나)-(가)-(라)　② (다)-(라)-(나)-(가)-(마)
③ (다)-(나)-(가)-(마)-(라)　④ (나)-(가)-(다)-(라)-(마)

【문20】 위 글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의료와 법률 서비스 분야의 진입 장벽이 높아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② 현재의 수학과 과학 교육은 이공계를 기피하는 한 원인이므로 개선해야 한다.
③ 의료, 법학 분야보다 이공계의 지식 습득 사이클이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심하다.
④ 의료와 법률 서비스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국가발전 토대를 빠르게 개편해야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21 ~ 문22】

나는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 나라마다 안으로는 정치상, 경제상, 사회상으로 불평등, 불합리가 있고, 밖으로 국제적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민족과 민족의 시기(猜忌), 알력(軋轢), 침략(侵略), 그리고 그 침략에 대한 보복(報復)으로 작고 큰 전쟁이 끊일 사이가 없어서 많은 생명과 재물을 희생하고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심(人心)의 불안(不安)과 도덕(道德)의 타락(墮落)은 갈수록 더하니, 이래 가지고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 인류는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 세계에는 새로운 생활 원리(生活原理)의 발견(發見)과 실천(實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담당한 천직(天職)이라고 믿는다.

이러하므로, 우리 민족의 독립이란 결코 삼천 리 삼천만 만의 일이 아니라, 진실로 세계 전체의 운명에 관한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인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오늘날 형편이 초라한 것을 보고 (㉡)을 발하여,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모욕(侮辱)하는 일이다. 우리 민족의 지나간 역사가 빛나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것은 아직 서곡(序曲)이었다. 우리가 주연 배우(主演俳優)로 세계 역사의 무대(舞臺)에 나서는 것은 오늘 이후다. 삼천만의 우리 민족이 옛날의 그리스 민족이나 로마 민족이 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武力)으로 정복(征服)하거나 경제력(經濟力)으로 지배(支配)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으니 그것은 공상(空想)이라고 하지 마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기에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 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청년 남녀(靑年男女)가 모두 과거의 조그맣고 좁다란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민족의 큰 사명(使命)에 눈을 떠서, 제 마음을 닦고 제 힘을 기르기로 낙(樂)을 삼기를 바란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힘을 쓸진댄 30년이 못 하여 우리 민족은 (㉢)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신(確信)하는 바다.

【문21】 위 글에서 지은이가 생각하는 ㉠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① 사랑과 평화의 문화를 실현하는 일
②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
③ 민주적인 정치 제도의 기틀을 확립하는 일
④ 일제의 침략에 맞서 무력으로 투쟁하는 일

【문22】 ㉡과 ㉢에 각각 들어갈 한자성어로 모두 적절한 것은?

① ㉡ : 자격지심(自激之心), ㉢ : 사상누각(砂上樓閣)
② ㉡ : 자포자기(自暴自棄), ㉢ : 청출어람(靑出於藍)
③ ㉡ : 자굴지심(自屈之心), ㉢ : 괄목상대(刮目相對)
④ ㉡ : 방약무인(傍若無人), ㉢ : 자화자찬(自畵自讚)

【문23】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 ~ ㉢의 성격을 모두 갖는 것은?

< 보기 >
㉠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하여 주는 조사는 보조사이다.
㉡ 상대 높임을 나타낸다.
㉢ 어절이나 문장의 끝에 결합한다.

① 조용히 해 주십시오.
②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③ 죽은 소와 돼지가 불쌍하지요.
④ 이것은 닭이요 저것은 돼지입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24 ~ 문25】

(가)
정월(正月)ㅅ 나릿므른 아으 어져 녹져 ᄒᆞ논ᄃᆡ
누릿 가온ᄃᆡ 나곤 몸하 ᄒᆞ올로 녈셔
아으 동동(動動) 다리

이월(二月)ㅅ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ㅅ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ᅀᅵ샷다
아으 동동(動動) 다리

삼월(三月) 나며 개(開)한 아으 만춘 ᄃᆞᆯ욋고지여
ᄂᆞᄆᆡ 브롤 즈슬 디녀 나샷다
아으 동동(動動) 다리

사월(四月) 아니 니저 오실셔 곳고리새여
므슴다 녹사(綠事)니믄 녯 나ᄅᆞᆯ 닛고신뎌
아으 동동(動動) 다리

오월(五月) 오일(五日)애 아으 수릿날 아ᄎᆞᆷ 약은
즈믄 ᄒᆞᆯ 장존(長存)ᄒᆞ샬 약이라 받ᄌᆞᆸ노이다
아으 동동(動動) 다리

유월(六月)ㅅ 보로매 아으 별해 ᄇᆞᄅᆞᆫ 빗 다호라
도라보실 니믈 젹곰 좃니노이다.
아으 동동(動動) 다리

- 작자미상, '동동(動動)'

(나)
처음에 못 생각하여 시서(詩書)를 일삼도다
중간에 망령되이 명리(名利)를 바라도다
물외(物外)에 풍월강산이 내 분인가 하노라

경륜(經綸)을 내 알더냐 구세(救世)할 이 없을러냐
태평시세(太平時世)는 얼마나 멀었는가
필부의 위국(爲國) 충심(忠心)을 내어 뵐 데 없어라.

- 이중경, '어부별곡(漁夫別曲)'

【문24】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에 대한 영원한 기다림의 의지를 다지고 있어.
② 시적화자의 태도나 감정에 일관된 흐름을 찾기가 어려워.
③ 달을 중심으로 한 풍속에 맞추어 여인의 연정을 노래하고 있어.
④ 자연물과의 대조를 통해 화자의 고독한 처지를 나타내고 있어.

【문25】 (나)의 다음 시어 중 <보기>의 밑줄 친 ㉠이 드러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보기 >
고전 시가 유형의 하나로서 '어부가'는 처사들이 어부를 은일지사의 표상으로 여겨, 스스로를 어부로 자처하며 자신의 심리적 대리인으로 조형되는 가짜 어부, 즉 가어옹(假漁翁)의 생애를 노래한 시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부가'는 전형적인 사대부의 노래이다. 사대부의 문학 전통에 있어서 가어옹을 통한 어부의 형상은 사대부의 유교적 세계인식과 심미 의식을 탐색할 수 있는 주요 요소이다. 즉 ㉠현실 속에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과 한적한 강호 생활의 동경이라는 양면성이 함께 드러난다.

① 명리 ② 물외 ③ 경륜 ④ 구세

【한국사 25문】

【문 1】 다음 자료의 상황 직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 지난 2년 간 미국은 얄타 협정을 실천하는 방도에 관하여 소련과 합의를 통해 한국을 독립시키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한국 독립 과업은 2년 전에 비해 추호도 진전된 것이 없다. 미·소 양군 점령 지구 간에는 38도선을 경계로 물자 교류 및 교통 왕래가 거의 두절된 상태이며 이로 말미암아 한국의 경제는 불구 상태에 빠졌는데, 이와 같은 상태를 계속 용인할 수 없다. 서울에서 두 차례 개최한 미·소 공동 위원회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더 이상 미·소 양국의 교섭에 의하여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도는 다만 한국의 독립을 지연시킬 뿐이다.

① 남북 지도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②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이관되었다.
③ 모스크바에서 3국 외상 회의가 열렸다.
④ 중도 세력이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하였다.

【문 2】 밑줄 친 '이곳'에서 한인들이 전개한 활동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국권 피탈 이후 많은 한국인이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일제가 만주 침략에 이어 중·일 전쟁을 도발하자 일본군이 이곳을 침략하기 위해 한국인을 첩자로 이용한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고 이것이 강제 이주의 구실이 되었다. 이곳의 한인들은 두 달 동안 곡식 씨앗과 옷가지, 책꾸러미들만을 보따리에 싸든 채 화물 열차에 실려 중앙 아시아로 끌려갔다.

〈 보 기〉

ㄱ. 성명회 조직　　ㄴ. 대한 국민 의회 조직
ㄷ. 대조선 국민군단 창설　　ㄹ. 대한 광복군 정부 결성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문 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 ·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의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 · 지조법을 개혁해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 · 혜상공국을 혁파한다.
> ·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 (나)
> · 외국인에게 기대하지 아니하고 관민이 동심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
> ·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하고 예산,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 · 지방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그 뜻을 물어 중의에 따를 것.
> ·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① (가) : 서구식 민주 공화국 설립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② (가) : 집권층의 요구로 파병된 청 병력에 의해 좌절되었다.
③ (나) : 일제의 화폐 정리 사업에 저항하였다.
④ (나) : 홍선 대원군의 재집권으로 타격을 받았다.

【문 4】 (가), (나)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가) "토지 1결마다 2번에 걸쳐 8두씩 거두어 본청에 수납하고, 본청은 그 때의 물가 시세를 보아 쌀로써 공인에게 지급하여 수시로 물건을 납부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임금(광해군)이 이에 따랐다.
> (나) 감면한 것을 계산하면 모두 50여 만 필에 이른다. 돈으로 계산하면 1백여 만 냥이다. 아문과 군대의 비용을 줄인 것이 50여 만 냥이다. 부족한 부분은 어세, 염세, 선세와 선무군관에게 받은 것, 은여결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당하였는데, 모두 합하면 십 수만 냥이다.

① (가) : 전세를 정액화하였다.
② (가) : 공인의 활동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③ (나) : 공납을 전세화한 것이다.
④ (나) : 양반과 노비도 군포를 납부하게 되었다.

【문 5】 다음 법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　1.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 2.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 하지 않는 자의 농지,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과수원 등 다년성 식물 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다년생 식물 재배 이외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한다.
>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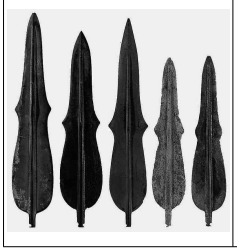
① 북한의 토지 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② 이승만 정부가 추진한 개혁 법안이다.
③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④ 자영농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문 6】 한국 현대사에서 전개된 사실들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가)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다.
> (나)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 정부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 (다) 정부는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및 소련,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유엔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① (가)-(나)-(다)
② (가)-(다)-(나)
③ (나)-(가)-(다)
④ (나)-(다)-(가)

【문 7】 (가) ~ (다)의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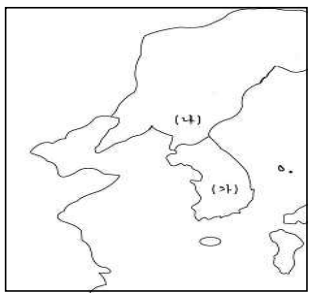
① (가) :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청동기 형태이다.
② (나) :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이 등장하던 시기에 처음 제작되었다.
③ (다) : 주춧돌을 사용한 집터에서 주로 발견된다.
④ (가), (나) : 우리 민족이 최초로 세운 국가의 특징적인 유물이다.

【문 8】 빈칸 (가)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질문 :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쌀 생산은 늘어났는데 한국 농민의 생활은 오히려 궁핍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답변 :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가) 때문입니다.

① 토지 조사 사업을 시작하였기
② 미곡 공출 제도를 실시하였기
③ 만주에서 잡곡을 대량 수입하였기
④ 수리 조합비, 비료 대금 등 비용 부담이 늘어났기

【문 9】 9세기 전반의 형세도이다.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 : 당의 영향을 받아 3성 6부의 정치 제도를 갖추었다.
② (가) : 지방군으로 10정을 두었는데, 한주(한산주)에는 2정을 두었다.
③ (나) :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④ (나) : 군사·행정상의 요지에는 5소경을 설치하고 장관으로 사신을 두었다.

【문10】 혼인풍습 중 친영제도가 정착되었던 시기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② 장남 이외의 아들도 제사에서 그 권리를 잃어 갔다.
③ 자녀는 연령순으로 호적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④ 대를 잇는 자식은 5분의 1의 상속분을 더 받는 것 외에 다른 형제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문11】 우리나라 불교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시대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그는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나) 그는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다) 그는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라) 그는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으며, 또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청사를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① (다)-(라)-(가)-(나)
② (다)-(라)-(나)-(가)
③ (라)-(다)-(나)-(가)
④ (라)-(다)-(가)-(나)

【문12】 (가), (나)시기에 목격될 수 있는 장면으로 옳은 것은?

○농민군 이끌고 고부 관아 습격 → 군수 추방, 아전 징벌
○정부, 안핵사로 이용태 파견 → 동학농민군 탄압

(가) ⇨

○6조를 8아문으로 개편
○과거제 폐지
○은본위 화폐제 실시
○도량형 통일

(나) ⇨

○태양력 사용
○종두법 시행
○소학교 설치
○'건양'이라는 새연호 사용

① (가) : 농민의 요구를 반영한 개혁을 시도하려는 교정청 관리들
② (가) : 일본이 요동 반도를 차지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권고하는 삼국의 대표들
③ (나) : 단발령 공포에 분노하여 항일 의병을 일으키는 유생과 민중들
④ (나) : 동아시아의 세력 확장을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영국 군인들

【문13】 (가), (나)의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정치와 외교도 교육을 기다려서 비로소 그 효능을 다할 것이요. 산업도 교육을 기다려서 비로소 그 작흥(作興)을 기할 것이니, 교육은 우리들의 진로를 개척함에 있어서 유일한 방편이요, 수단임이 명료하다. 그런데 교육에도 단계와 종류가 있어서 …(중략)… 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며, 유위유능(有爲有能)의 인물을 양성하려면 최고 학부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도다.
(나) 의복은 우선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치마를 음력 계해 정월 1월부터 조선인 산품 또는 가공품을 염색하여 착용할 것이며, 일용품은 조선인 제품으로 대응하기 가능한 것은 이를 사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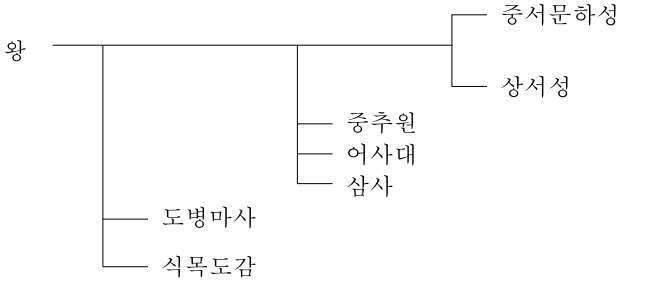
① (가) :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고, 방해하였다.
② (나) :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③ (가), (나) : 사회 진화론의 입장에서 추진된 민족 운동이다.
④ (가), (나) :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비타협적 민족 운동이 강화되었다.

【문14】 조선 시대 예송 논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 (나)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 분	(가) 붕당	(나) 붕당
효종 복상기간(1차) (기해 예송)	3년	1년
효종비 복상기간(2차) (갑인 예송)	1년	9개월
근 거	국조오례의	주자가례
정치적 입장	왕권 강화	신권 강화

① (가) : 이이의 학맥을 계승하였다.
② (가) :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었다.
③ (나) : 인조를 옹립한 인조반정을 주도하였다.
④ (나) :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분화되었다.

【문15】 다음 정치 제도와 관련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ㄱ. 발해의 중정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구가 있다.
ㄴ. 도병마사는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회의하는 곳이다.
ㄷ. 어사대는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더불어 대간으로 불렸다.
ㄹ. 삼사의 언론은 고관은 물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16】 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각 조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제1조 대한 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에 초빙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것.
(나) 제4조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대한 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 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다) 각서 제3-1. 육군 1대대를 존치하여 황궁 수위를 담당하게 하고 기타 부대는 해체한다. 제5. 중앙 정부 및 지방청에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함.

① (가) : 러·일 전쟁의 전세가 유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내정 간섭을 강화한 것이다.
② (나) :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강제로 체결한 것이다.
③ (다) : 고종의 강제 퇴위 후 체결된 한·일 신협약의 결과이다.
④ (가), (나), (다)의 순서로 체결된 후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었다.

【문17】 밑줄 친 '이 무덤'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무덤은 1971년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래서 무덤의 봉토가 드러난 다른 무덤과는 달리, 완전한 형태로 빛을 보게 되었다. 무덤의 안에서는 지석이 발견되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 또한, 왕과 왕비의 장신구와 금관 장식, 귀고리, 팔찌 등 껴묻거리가 출토되어 백제 미술의 귀족적 특성을 알려준다. 아울러 무덤의 연도 입구에서는 진묘수가 발견되었다.

① 중국의 영향을 받아 연꽃 등 화려한 무늬의 벽돌로 무덤 내부를 쌓았다.
② 말의 배 가리개에 하늘을 나는 천마를 그린 그림을 그려 넣었다.
③ 돌로 1개 이상의 방을 만들고 그것을 통로로 연결한 무덤 양식이다.
④ 봉토 주위에 둘레돌을 두르고, 12지 신상을 조각하였다.

【문18】 (가) 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에는 대군장(大君長)이 없고 … 후(侯)·읍군(邑君)·삼로(三老)의 관직이 있어서 하호(下戶)를 통치하였다. … 언어와 예절 및 풍속은 대체로 고구려와 같지만 의복은 다르다. …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 주야로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춘다.

<삼국지>

①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② 정치 체제는 연맹 왕국 단계였다.
③ 수렵 사회의 전통을 계승한 제천 행사를 열었다.
④ 하호는 주인에게 예속되어 생활하는 천민층이었다.

【문19】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되던 시기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으로 옳은 것은?

제1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일정한 주거 또는 생업 없이 이곳 저곳 배회하는 자
8.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자
14. 신청하지 않은 신문, 잡지, 기타의 출판물을 배부하고 그 대금을 요구하거나 억지로 그 구독 신청을 요구하는 자
20.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또는 불온 문서, 도서, 시가(詩歌)를 게시, 반포, 낭독하거나 큰 소리로 읊는 자
21. 남을 유혹하는 유언비어 또는 허위 보도를 하는 자

-『조선 총독부 관보』-

제1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6조 태형은 태로서 볼기를 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조선 총독부 관보』-

① 한인 애국단원 이봉창과 윤봉길 등이 의열 활동을 전개하였다.
② 임시 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고 대일 선전 포고를 하였다.
③ 대한 독립 의군부와 대한 광복회 등의 비밀 결사들이 활동하였다.
④ 언론 기관과 조선어 학회가 한글 보급을 통한 문맹 퇴치 운동을 펼쳤다.

【문20】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지방 일대에 9성을 쌓았다.
↓
(가)
↓
○ 금이 군신 관계를 요구해 오자 이자겸이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
↓
(나)
↓
○ 몽골이 금을 공격한 후 고려를 침공하였다.

① (가) : 고려가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② (가) :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을 물리쳤다.
③ (나) : 삼별초가 대몽 항쟁을 전개하였다.
④ (나) : 묘청이 서경 천도 운동을 일으켰다.

【문21】 다음 주장이 발표된 배경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재물정사(財物政事)는 비유컨대 사람의 온몸의 피와 맥과 같으니 그 혈맥을 보호하여 기르는 것은 각각 자기들에게 있지 남이 보호하여 주고 길러주지 못한다.
○ 국내에 금·은·석탄광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취하여 그 이익을 얻을 것이지 하필 외국에 넘겨 본국은 날로 가난케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부강케 하리오.
○ 대한 토지는 선왕의 크신 업이요 1천 2백만 인구의 사는 땅이니 한 자, 한 치라도 다른 나라 사람에게 빌려주면 이는 곧 선왕의 죄인이요 1천 2백만 동포 형제의 원수이다.

〈 보 기〉

ㄱ.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였다.
ㄴ. 러시아가 절영도의 조차를 요구하였다.
ㄷ. 프랑스와 독일이 광산 채굴권을 요구하였다.
ㄹ. 일본이 시설개선의 명목으로 차관을 제공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22】 다음 정책을 실시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두기를 청하였다. 스스로 판사(장관)가 되어 전국에 알렸다. "요즈음 기강이 크게 무너져서 탐욕스러움이 풍속으로 되었다. 종묘·학교·창고·사사·녹전·군수의 땅은 백성이 대대로 지어온 땅이나 권세가들이 거의 다 뺏었다.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도 그대로 가지며 양민을 노예로 삼고 있다. (줄임) 이제 그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치는 자는 묻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한을 지났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다가 발각되면 조사하여 엄히 다스릴 것이다."

-『고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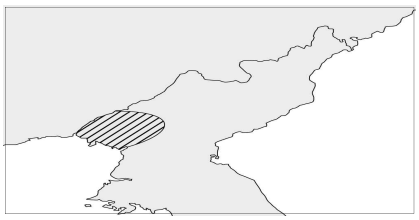
① 관수관급제의 시행 ② 전시과 제도의 실시
③ 지방 호족 세력의 약화 ④ 국가의 재정 수입 기반 확대

【문2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헌정 연구회를 모체로 설립된 단체로 독립을 위해 '자강(自强)'을 주장하였다. 자강의 방법으로는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켜 흥하게 하는 것이라 강조하였으며,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월보의 간행과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나) 안창호,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되어 회원 800여명이 참여하여 결성된 단체로 평양에 대성학교와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평양에 자기 회사를 운영하여 민족 자본 육성에도 힘썼다.

① (가) : 정미 7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② (가) : 일제의 통감부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③ (나) : 공화 정체의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④ (나) : 국내에서 전개된 계몽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였다.

【문24】 지도의 빗금친 부분에 대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당 전쟁 중 신라가 당의 20만 대군을 격파한 격전지를 알아본다.
② 김윤후가 대몽 항쟁 중 살리타를 무찌른 전투를 조사한다.
③ 정봉수가 의병을 일으켜 후금의 군대를 물리친 전투를 확인한다.
④ 신돌석이 민중적 기반으로 전개한 항일 의병 전투를 살펴본다.

【문25】 다음 선언이 발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신인 일치(神人一致)로 중외 협응(中外協應)하야 한성(漢城)에서 의(義)를 일으킨 이래 30여 일간에 평화적 독립을 3백여 주에 광복하고, … 항구히 자주 독립의 복리로 아(我) 자손 여민(子孫黎民)에게 세전(世傳)하기 위해 임시 의정원의 결의로 임시 헌장을 선포하노라'

① 거족적인 민족 운동이 일어난 후 조직적으로 독립 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② 자치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민족 협동 전선 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키자 각지의 무장 세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었다.
④ 독립 운동의 방략을 둘러싸고 창조파와 개조파가 갈등하였다.

【영 어 25문】

【문 1】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Governments become more vulnerable when economies falter; in fact, the credibility of government is often thought to be linked very closely to _____. In the early stages of the 2008 crisis, the governments of Belgium, Iceland, and Latvia fell. In 2009, the government of Kuwait dismissed the parliament after a dispute over the handling of the financial crisis. The Hungarian government collapsed in 2009 for similar reasons. So did that of the Czech Republic, leaving the rotating presidency of the European Union in chaos. There are many historic examples of government collapse in the wake of financial disaster.

① cultural conflict management
② historical analysis on the past
③ effective economic performance
④ democratic system in government

【문 2】 글의 흐름으로 볼 때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They believe that executing a criminal is the only way to protect society from further crime.

Capital punishment is the legal infliction of death as the penalty for violating capital laws. It is also known as the death penalty, and it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practices in the modern world. (①) Arguments both for and against the practice are often based on religion and emotions. (②) Those in favor of capital punishment believe that it deters crime and offers closure or a sense of justice for the family of the victim. (③) On the other hand, those opposed believe that it is barbaric and allows government to sink to the level of the criminal. (④)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the person being executed is really innocent, even with extensive background checks, and investigations.

【문 3】 다음 글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In 1953 Eisenhower appointed Earl Warren as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 appointment that began a new era in ①judicial history. The Warren Court transformed the American legal system by expanding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In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1954), the Warren Court declared state laws establishing separate public schools for black and white students ②unconstitutional. In 1955 the Court ordered the states to desegregate schools "with all deliberate speed." However, many people resisted school ③integration. In 1957 the governor of Arkansas, Orval Faubus, tried to ④expedite the enrollment of nine black students into Little Rock High School. In response, Eisenhower sent federal troops to desegregate the school. The Brown decision began a new era in civil rights.

① judicial ② unconstitutional
③ integration ④ expedite

【문 4】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discovery that the seeds of the coffee fruit tasted good when roasted was undoubtedly the key moment in coffee history. It marked the beginning of the transformation of coffee from an obscure medicinal herb known only in the horn of Africa and southern Arabia to the most popular beverage in the world. A skeptic might counter that it is caffeine, not flavor that made coffee into on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commodities. This argument is difficult to sustain, however. Tea, yerba mate, cocoa and other less famous plants also contain substances that wake us up and make us feel good. Yet none has achieved quite the same universal success as coffee. Furthermore coffee figures as important flavoring in countless candies, cookies, cakes and confections.

It is clear that the ___(A)___ has(have) a great deal to do with its triumph as the ___(B)___ in the world.

(A) (B)
① aromatics of roasted coffee … most popular artificial flavor
② aromatics of roasted coffee … most favored beverage
③ caffeine in roasted coffee … most popular artificial flavor
④ caffeine in roasted coffee … most favored beverage

【문 5】 다음 글의 요지를 아래와 같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Problems, problems! Some would-be problem solvers are so overwhelmed by the problem that they usually fail. There are others who approach the problem calmly and practically, and usually solve it. Still others - only the truly inventive - find a unique solution to the problem in order to prove a point. For example, Alexander the Great, an ancient Greek ruler, was said to have been challenged to untie the Gordian knot. In mythology, this knot was fastened to a wagon and was thought to be impossible to undo. The great ruler was able to accomplish the task easily, however. He simply cut the knot with his sword! Tradition has it that Christopher Columbus was once given a challenge, too. In 1493, he attended a banquet in his honor, where he was questioned about how he had coped with the difficulties of his voyage to the New World. Columbus replied by challenging his questioners to balance an egg. When they couldn't, he did. How? He cracked the shell to create a flat bottom!

---> According to the passage above, we can infer that some difficult problems _____.

① could be solved easily
② gave us questions
③ gave us challenges
④ could be solved by the science

【문 6】 Bernice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Marjorie and Bernice reached home at half past midnight, they said good night at the top of the stairs. Although they were cousins, they were not close friends. In fact, Marjorie had no female friends - she considered girls stupid. Bernice, on the other hand, had hoped that she and Marjorie would share their secrets. She had looked forward to long talks full of girlish laughter and tears. For her these were an important part of all feminine conversation. However, she found Marjorie rather cold. For Bernice it was as difficult to talk to Marjorie as it was to talk to men.

① satisfied and happy
② relieved and rested
③ terrified and panicked
④ uncomfortable and awkward

【문 7】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Friendship is a long conversation. I suppose I could imagine a nonverbal friendship revolving around shared physical work or sport, but for me, good talk is the point of the thing. (A)Indeed, the ability to generate conversation by the hour is the most promising indication, during the uncertain early stages, that a possible friendship will take hold. (B)In the first few conversations there may be an exaggeration of agreement, as both parties angle for adhesive surfaces. (C)Friendship based on utility and pleasure are founded on circumstances that could easily change. (D)But later on, trust builds through the courage to assert disagreement, through the tactful acceptance that differences of opinion will have to remain.

① (A)　② (B)　③ (C)　④ (D)

【문 8】 밑줄 친 단어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Victor didn't know what to say. The teacher wet his lips and asked something else in French. The room grew silence. Victor felt all eyes staring at him. He tried to <u>bluff</u> his way out by making noises that sounded French.

① deceive　② lament　③ avoid　④ investigate

【문 9】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saying goes: _____.
In language teaching, teachers can provide all the necessary circumstances and input, but learning can only happen if learners are willing to contribute. Their passive presence will not suffice. In order for learners to be actively involved in the learning process, they first need to realize and accept that success in learning depends as much on the student as on the teacher. That is, they share responsibility for the outcome. In other words, success in learning very much depends on learners having a responsible attitude.

① learn to walk before you run
② burn not your house to fright the mouse away
③ do as most men do, then most men will speak well of you
④ you can bring the horse to water, but you cannot make him drink

【문10】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Bootle, England, a city of 55,000, people were bombed nightly for a week during World War Ⅱ with only 10 percent of the houses escaping serious damage. Yet one-fourth of the population remained asleep in their homes during the raids. Only 37 percent of the London mothers and children who were eligible for evacuation left the city during the war crisis. Furthermore, even during periods of heavy bombing in London, evacuees drifted back nearly as rapidly as they were being evacuated. Similar findings are on record for Germany and Japan during World War Ⅱ. This should not be surprising. Human beings have a very strong tendency to _____.

① continue with their established behavior patterns
② play a definite role within their group
③ run away in a panic during emergency situations
④ initiate new courses of action

【문11】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It is common these days to eat a healthy and balanced diet. This means watching ①<u>what</u> you eat. A variety of foods are great for maintaining a good body. Of course, the healthier your body, ②<u>the less</u> likely you are to encounter disease. Most people who become overweight or get heart attacks are unhealthy ③<u>because</u> they eat too much food with the wrong types of fat. Therefore, the best way to avoid problems ④<u>are</u> to eat the right balance of meat, fish, vegetables and dairy products.

【문12】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We solve problems every day. For a computer to solve a problem, not only must the solution ①<u>be</u> very detailed, it must be written in a form the computer can understand. An algorithm is a procedure for solving a problem. It is a step-by-step set of instructions that, if ②<u>carried out</u>, exactly solves the problem. While a computer follows instructions very rapidly, it does only and exactly what it ③<u>tells</u>. Algorithm are used to ④<u>design</u> these very specific instructions.

【문1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light rays from the sun are refracted by the atmosphere. The closer the sun is to the horizon, the more this refraction is. Consider the sun when its lower edge appears to be on the horizon. Were it not for the refraction, the sun would just then actually have its lower edge a little more than half a degree below the horizon. The upper edge, in the meantime, appears to be slightly less than half a degree from where it would be if there were no refraction. As a result, the vertical width of the sun appears to be somewhat less than it would be with the sun overhead. The horizontal width suffers very little shortening due to refraction. Thus, when the sun is on the horizon, it appears to be an ellipse.

① why does refraction occur
② the laws of the refraction of light
③ what makes the swelling of the sun
④ the cause of the flattening of the sun

【문14】 (A),(B),(C)의 각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natural habitat can change for natural reasons or unnatural reasons. As regards to the former, climate change is a major possibility. Natural grasslands are the result of a specific set of climatic characteristics. So if those climatic factors change, you would expect grasslands (A)[change / to change], too. Now ample evidence exists of climate change in Africa. But the nature and extent of it is insufficient to explain the wholesale disappearance of grasslands over the wide area (B)[indicated / indicating] on the map. So climate is not the culprit. Instead, the fault lies elsewhere and mainly (C)[take / takes] the form of human beings.

	(A)	(B)	(C)
①	change	indicated	take
②	change	indicating	takes
③	to change	indicated	take
④	to change	indicated	takes

【문15】 글의 흐름으로 볼 때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But what are the causes of this trend?

Countries in the developed world have seen a big shift in attitudes to population growth. Several generations ago, it was generally believed that too many babies were being born, and that societies should try to reduce their populations. (①) Nowadays, however, the concern is the reverse – that birthrates are falling too low and that urgent action is needed to encourage people to have more children. (②) And how much are the attitudes and lifestyles of young people to blame? (③) This essay will consider a number of explanations for the so-called "baby crash". (④) My argument will be that to hold young people responsible is neither valid nor helpful. The best explanation, I believe, is to be found in the condition of increased economic insecurity faced by the young.

【문16】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very hour of every day, one thousand children, women and men die from preventable illness. While life expectancy has continued to climb in the world's most affluent countries, it is decreasing in many of the poorest countries. That is simply not right. And the world has means to address this injustice. For more than 30 years, we have worked to see that these means are put into action. Tremendous strides have been made but much is left to accomplish. You can help us as we work with governments and multilateral agencies to ensure that adequate resources and sound policies are applied to global health. Your support also enables us to make sure that effective, low-cost health-care practices are recognized and promoted. Your financial support helps us save lives. Not dozens or even hundreds of lives, but millions.

① 빈곤 퇴치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려고
② 저소득층의 기대 수명 연장 방안을 공모하려고
③ 세계적 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을 모으려고
④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려고

【문17】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re is a small amount of scientific evidence for an increase in certain types of rare tumors(cancer) in long-time, heavy mobile phone users. More recently a pan-European study provided significant evidence of genetic damage under certain conditions. Some researchers also report the mobile phone industry has interfered with further research on health risks. So far, howeve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ask Force on EMF effects on health has no definitive conclusion on the veracity of these allegations. It is generally thought, however, that RF is incapable of producing any more than heating effects, as it is considered Non-ionizing Radiation ; in other words, it lacks the energy to disrupt molecular bonds such as occurs in genetic mutations.

① the benefits of using mobile phones
② the health effects of using mobile phones
③ the radiation characteristics of mobile phones
④ the need for precautions for the use of mobile phones

【문1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바르지 않은 것은?

Code talkers was a term used to describe people ①<u>who</u> talk using a coded language. It is frequently used to describe Native Americans who served in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②<u>which</u> primary job was the transmission of secret tactical messages. Code talkers transmitted these messages over military telephone or radio communications nets ③<u>using</u> formal or informally developed codes built upon their native languages. Their service was very valuable because it enhanced the communications security of vital front line operations ④<u>during</u> World War II.

① who ② which ③ using ④ during

【문19】 내용상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On 26 April 2003, the civil courts of the English legal system are to undergo a huge change. A new set of rules is being brought in to simplify and streamline procedures, in an attempt to make litigation quicker, cheaper and simpler. An 800-page document published by the Lord Chancellor's Department abandons traditions in favor of new procedures that give judges an active role in managing cases and dictating the pace of litigation. One of the more significant changes is that of ___(A)___. For the first time, people outside the legal system have been involved in the process of drawing up the rules. As a result, many common but ___(B)___ legal terms have been discarded, to be replaced by simple English, or at least English that is as simple to understand as possible in such a complex field. The Plain English Campaign, which has been fighting for 20 years to change legal language, is delighted: "This may be our greatest victory yet," its founder, Chrissie Maher, is quoted as saying.

	(A)	(B)
①	language	obscure
②	language	obvious
③	behavior	obscure
④	behavior	obvious

【문20】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deas are created by integrating previous ideas and sensory input. Due to this dependency of ideas on previous ideas or sensory input, we know that knowledge is _____. Every higher level concept is based on a lower level information. At the root of all of this, of course, is perception. The very first concepts are derived directly from perceptions, via reason. Future concepts can then use the first concepts as part of their base, but the foundation is always there.

① horizontal ② hierarchical
③ goal-oriented ④ multidirectional

【문21】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ith the publication in 1789 of the *Elements of Chemistry* by Lavoisier, the science of chemistry served its remaining connections with the alchemical past and assumed a modern form. Lavoisier stress the importance of quantitative methods of investigation in chemistry, and in this connection he introduced the principle of the _____ of matter which stated that nothing was lost or gained during the course of a chemical reaction, the weight of the products equalling the weight of the starting materials.

① reduction ② deprivation
③ conservation ④ accumulation

【문2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바르지 않은 것은?

One of your greatest mental powers ①<u>is</u> imagination. You can visualize anything you want and you can embellish and exaggerate your imagery as ②<u>much</u> as you want. For example, you could imagine the free fatty acids ③<u>being burned</u> for energy in the "cellular powerhouse" - the mitochondria - and you could imagine the mitochondria as a fiery furnace... "incinerating" the fat! I think it's a pretty cool idea to "see" your fat cells shrinking and ④<u>visualizing</u> your body as a "fat burning furnace".

① is ② much ③ being burned ④ visualizing

【문23】 다음 글에서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A child born into society must be fed and looked after. In many societies, the parents of the child are responsible for his welfare and therefore perform a function for society by looking after the next generation. ①As the child grows up, surrounded by brothers and sisters, his parents and sometimes by a member of the extended family group, he gradually learns things about the society in which he lives. ②For example, he will learn its language, its idea about right and wrong, its ideas about what is funny and what is serious and so on. ③Census estimates the number of unmarried heterosexual couples who cohabit has reached a startling 6.4 million couples in 2007. ④In other words, the child will learn the culture of his society through his contact with, at first, the members of his family.

【문24】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Global food prices are going through the roof, threatening to push the world into a war over food. Earlier this month, the U.N.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said world food prices hit their highest level ever recorded in January and _____ in the months to come. It is a strong signal that a severe global food crisis is imminent or under way.

① were set to keep rising ② have set to keep raising
③ have set to keep rising ④ were set to keep raising

【문25】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The works of discovery in every age ①<u>shape</u>—and shake up—the thinking of the whole literate community. And this effect has multiplied with the rise of democracy and literacy. The familiar example, of course, is ②<u>how</u> the works of Copernicus(1473-1543) and his followers disturbed Western culture with the realization that the earth was no longer the center. More ③<u>recently</u> examples are the impact of Darwinian biology and Freudian psychology. Nowadays, the space sciences, arcane and specialized ④<u>though</u> they have become, continue to have a profound and wide influence on the whole community's thinking.

【민 법 25문】

【문 1】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②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는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③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받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문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의의 점유자는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취득권을 가지는바, 취득한 과실 내지 과실취득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③ 악의의 점유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가 적용되므로 이익의 현존 여부나 점유자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문 3】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라 해도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②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를 상대로 하는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③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므로,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뿐만 아니라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도 포함하므로, 어느 경우에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4】 전대차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시에 비로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에서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② 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③ 계약기간 중에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면 전대인은 이미 지급받은 권리금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전차인에게 반환하면 된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문 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②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다.

④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문 6】 혼인의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② 비록 부부의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이념이나 부부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실현에 관하여 간접강제를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동거의무 또는 그를 위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자료배상책임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③ 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수권행위가 필요한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④ 사실혼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관한 상호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7】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은 받을 수 있다.
④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문 8】 증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부담 없는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으로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③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문 9】 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④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10】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이 있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③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④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본인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11】 다음 중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취득, 변경, 상실)이 일어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②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고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수급인이 약정한 대로 건물을 완성하였다.
③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상속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문12】 공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③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채무의 일부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공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음이 원칙이다.

【문13】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전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② 소비대차에 있어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는 그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변제기 전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재량감액의 대상이 된다.
④ 외화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원칙적으로 외화채권이다.

【문14】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②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는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제3자도 포함된다.
③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15】 보증채무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된다.
②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③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④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보증인은 그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문16】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② 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보존행위와 달리,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가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장래의 책임재산 처분행위와 그 실질에 있어 동일하여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④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의 매수인에게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별도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문17】 흠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모르는 데 과실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③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들도 원칙적으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문18】 법률행위의 동기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③ 다만 위와 같은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굳이 그러한 동기를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하다.
④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문19】 이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②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④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라 해도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양육비청구 이전의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20】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지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과실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21】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 나아가 그 사실을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②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 제한에 위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③ 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그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도 민법 제35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④ 교회가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 성립되기 이전에 그 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그것이 앞으로 성립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바로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귀속될 수는 없다.

【문22】 가등기 내지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 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해 물권변동의 시기는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문23】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해제의 소급효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의 규정은 해제권이 행사되었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협력에 의하여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라 해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계약해제 내지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④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문24】 타인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사무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인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한다.

②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것이 제3자에 의한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그러한 변제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④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최소한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는 확정되어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있다.

【문25】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과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양자 모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양자 모두 추인거절로 간주된다.

③ 기간 내에 추인을 하면 양자 모두 무효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④ 두 경우 모두에 있어 최고의 법적성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인데 반하여, 그에 대한 추인의 법적성질은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라는 점은 같다.

【민사소송법 25문】

【문 1】 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② 제3자가 행한 사기에 의하여 소송상의 화해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화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재판상 화해에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가능하고 그 실효조건의 성취로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④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며, 그 경우 제3자에 대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미친다.

【문 2】 법정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소를 제기한 뒤 그 동의를 받지 못하면 후견인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나, 상고심에서 그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소를 취하하기 위하여는 다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상대방의 소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문 3】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할 수 있다.

② 공동소송인 중 1인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는 유리, 불리를 묻지 않고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③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된다.

④ 공유물분할청구는 분할을 구하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문 4】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② 전소에서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변론종결 후에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면,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법률효과)를 다시 다투더라도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③ 전소에서 정지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후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5】 제척·기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론종결 후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당해 재심사건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③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 중 판결선고에만 관여한 경우에는 불복사건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④ 법관이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불복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문 6】 사물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최고가인 9,000만 원으로 입찰을 하였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갑이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②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은 지방법원의 다른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③ 10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보증인에 대하여 새마을금고가 2011. 2. 9.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④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가 2011. 2. 9. 제1심으로 판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소송목적의 값이 9,000만 원인 경우 그 항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문 7】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③ 본소가 각하된 경우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므로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불허할 수는 없다.

【문 8】 처분권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식적 형성의 소에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원고가 구하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의 각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비록 일부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였지만 청구총액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처분권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③ 이자청구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원금·이율·기간 등 3개의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그 가운데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을 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이자액의 범위 내의 금액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문 9】 소송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관할 위반과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위반의 주장, 중재합의의 항변은 본안에 관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
③ 소송계속 중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 자체가 부적법해지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피고의 다툼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그치므로 그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판단누락의 상고이유는 되지 않는다.

【문10】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할 수 있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②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에 대하여는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③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은 무조건이어야 하고 조건 또는 기한부 청구의 포기나 인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불출석한 당사자가 진술간주되는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를 적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문11】 소송구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 등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경우에는 패소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할 수 있다.
④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람은 그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문12】 다음 중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를 회원으로 하여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하여 온 아파트 부녀회
② 사립대학교 졸업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소송에서의 해당 사립대학교
③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서 독자적인 규약(지부준칙)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조직체인 노동조합 지부
④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자연부락

【문13】 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의 취하는 원고의 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②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원고가 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③ 피고가 원고의 소취하의 전제조건으로 하였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이 해제·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재소 제기가 가능하다.
④ 본안판결 후에 취하한 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한 채권자일 때에는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는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다.

【문14】 적시제출주의 및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제출·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적시제출주의에 위반한 경우 각하의 대상은 공격·방어방법, 즉 주장·부인·항변·증거신청 등이고 반소·소의 변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넘긴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정기간에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되었을 때, 제1심의 경과까지 전체를 살펴 시기에 늦었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15】 석명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신청이나 주장에 불분명, 불완전, 모순을 제거하는 방향의 소극적 석명은 허용된다.
② 새로운 신청, 주장,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권유하거나 시사하는 적극적 석명은 변론주의에 위반되므로 일체 허용될 수 없다.
③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토지인도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은 적극적 석명사항이다.

【문16】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개의 소로써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경우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②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③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④ 소송목적의 값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닌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문17】 가집행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므로,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가집행면제선고 역시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②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③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도 담보한다.
④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그 가집행채권자는 고의·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18】 상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전부승소한 원고가 소의 변경 또는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해 상소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 전부승소한 피고가 반소를 위해 상소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 전부승소자의 나머지 잔부를 청구하기 위한 항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예비적 상계의 항변이 이유 있다 하여 승소한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문19】 재판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권의 존재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② 소장 심사시 재판권 없음이 명백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재판권의 부존재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재판권의 부존재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문20】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출석하였으나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 불출석으로 된다.
② 변론준비기일과 판결선고기일에도 기일해태의 효과가 발생한다.
③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통지를 받고 불출석한 경우는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법정 외에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기일에도 기일해태의 효과가 발생한다.

【문21】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대리인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소송상 화해를 한 경우,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는 화해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문22】 다음 중 소송물이 동일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② 기망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매매계약의 부존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③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를 달리하여 구하는 각 재심의 소
④ 해상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화물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문23】 소 제기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② 소송이송이 있을 경우에도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점은 관할법원이 이송받은 때가 아니라 이송한 법원에 처음 소가 제기된 때이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행사이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다.
④ 중복 소제기에 해당하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후소를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24】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증명하면 착오에 의한 자백임이 추정된다.
② 당사자본인신문의 결과 중에 당사자의 진술로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는 것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없다.
③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재판상 자백이다.

【문25】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② 당사자는 제1심의 종국판결 뒤에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③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항소의 취하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형 법 25문】

【문 1】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② 대표이사가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납품업자에게 가공의 납품업체를 만들게 한 뒤 그 납품업체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은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④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2】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④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3】 사기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③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경우, 그 후 명의인이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하여 갔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문 4】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란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위증죄에 있어서 진술의 내용은 요증사실에 관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에 한정된다.

【문 5】 강도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관에 들어가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행위는 피해자별로 강도상해죄 및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②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④ 강간범이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가방을 빼앗은 경우 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

【문 6】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의 경우, 상대방과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②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가 계속 회피하며 만나 주지 않자 내연관계를 회복시켜 볼 목적으로 그녀의 물건을 가져 와 보관한 후 이를 찾으러 오면 그 때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물건을 가져 왔고 그녀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그녀에게 연락하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용 내지 소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반드시 절도범인과 점유자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재물을 사용한 후에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여 소유자가 우연히 이를 반환받을 수 있게 한 데 불과한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문 7】 배임수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본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②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③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한다.

② 외부 전문기관이 작성·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결재·승인한 검사조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③ 유가증권위조죄의 공범 사이에서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문 9】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형의 선고는 유예하더라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있다.

②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므로 몰수할 수 있다.

④ 기소되지 않은 공범의 소유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문10】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③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도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

④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문11】 죄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배임행위를 한 경우 양 죄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어 사기죄의 1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③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문12】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①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본범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자가 그 사기 피해자로부터 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② A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다는 정을 알면서 B가 A로부터 그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③ 매수인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는 토지 소유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토지를 처분한다는 정을 알면서 乙이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④ 장물을 타에 매각하여 받은 돈임을 알면서 본범으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은 경우

【문13】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

② 공무원이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④ 본죄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문14】 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그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하고 그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다.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③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문15】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도 포함된다.
②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있는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청탁과 함께 받은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후환이 두려워 2주일 후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의 고의는 인정된다.
④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받은 금품 전부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문16】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② 형벌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허용된다.
③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그 후 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하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17】 다음 중 교사범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②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언제나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③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도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문18】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장래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④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19】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②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문20】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행위시법에 의하면 범죄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후 법률의 폐지로 인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항상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다.
③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문21】 도박개장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박을 개장한다 함은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도박이 현실로 행해질 것을 요한다.
③ 본죄는 영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목적범이다.
④ 본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기수 이후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도박장소를 폐쇄하였을 때에 종료한다.

【문22】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문서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②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범인 을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④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문23】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강도상습성의 발현으로 강도예비행위를 한 경우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강도죄에 흡수되고 별개의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기소되어 처단되었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③ 중고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존재함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보충하여 위조한 후 乙이 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乙의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24】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금원을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③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정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그 업무를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하는 공동매수약정을 맺었음에도 그에 반하여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후 해당 토지에 관해 수령한 도시개발사업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부분에 대한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경우, 위 소유권확인증서 작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25】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②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갑과 을이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게 되자,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행위를 통하여 이들을 필기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위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경찰관의 범죄수사권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25문】

【문 1】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관하여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2】 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여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나, 그 취소는 취소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 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 4】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②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진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문 5】 항소심 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② 항소제기기간은 7일이다.
③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때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다.
④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 6】 변론의 병합·재개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사건이 각각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에 계속된 경우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④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바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문 7】 다음 배상명령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법원은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며,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제1심의 형보다 중하므로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③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④ 추징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추징액을 제1심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문 9】 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나,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나,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한다.
④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외에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나,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소환을 받은 증인에 한하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다.

【문10】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법원과 현재지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에 현재지 관할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그 판결에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다.
② 수개의 관련사건의 토지관할이 다르더라도 동일법원에 계속된 이상 각 사건을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④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외에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도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에 해당한다.

【문11】 감정유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이를 구속으로 간주하여 산입한다.
③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불구속 상태에서 감정유치장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문12】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② 약식명령의 송달 자체가 부적법하더라도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본 이후에야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④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문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제기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가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 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

【문14】 공판준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전이라도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15】 증거조사 후 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후 검사의 의견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데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문16】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③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고, 피해자 등은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문17】 공소제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②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의 기간을 계산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④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18】 국선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까지는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있다.
②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국선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임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 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문19】 소송서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는 상대적인 것이다.
②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하고,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나,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문20】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의 청구는 공소제기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나 제1회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의 처분을 한 후에 그 처분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은 처분을 한 판사가 소속하는 법원에 보관한다.
③ 증거보전의 청구는 반드시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후에도 수소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다.
④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피의자 신문·증인신문·감정·검증과 압수·수색에 한한다.

【문21】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②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주거제한 등의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를 몰취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22】 체포 · 구속적부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석방결정은 그 결정서의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④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을 뿐인 직권보석이다.

【문23】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②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④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24】 약식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하여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또는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공판절차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④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문25】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등) 및 제313조(진술서등)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보다 먼저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한 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다.

④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상 법 25문】

【문 1】 상법상 창고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창고임치계약의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주간 전에 예고를 하고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② 창고업자는 임치물의 일부를 출고한 경우에는 전부를 출고할 때까지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수령한 후 임치인의 청구가 있으면 창고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④ 창고증권의 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문 2】 다음 상인간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고, 경매대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일정한 기한까지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한 경우, 그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매매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특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인간의 임대차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3】 상법상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③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상호계산에 있어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문 4】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 ·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설립무효의 소를 심리하는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③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설립무효의 소에 관하여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고,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 · 이사 또는 감사도 다시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5】 다음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흡수합병에 있어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②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할무효의 소는 분할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분할무효의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다.

【문 6】 다음 중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논외로 한다)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 7】 다음 유한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회사는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출자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② 유한회사의 사원은 총사원의 과반수,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은 정관에 의하여 완화할 수 없다.

③ 유한회사에도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④ 유한회사의 경우 정관에 미리 규정이 없더라도 사원이 아닌 제3자가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문 8】 다음 중 상법상 사채(社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채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회의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④ 판례는 원칙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전환사채 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상법 제429조 소정의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문 9】 다음 중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도 있다.
② 주식회사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주식 양도의 승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④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문10】 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준비금 상당의 자산을 반드시 금전으로 보유하고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② 회사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③ 회사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 및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자본이 증가하고 전입액을 액면가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되지만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다.

【문11】 상법상 개인상인의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상법상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고, 위 등기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 소멸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문12】 다음 화물운송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등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송물이 전부멸실됨으로 인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을 인도할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③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서만 미치고,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④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 운송인은 그에 대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13】 상법상 주주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위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면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회사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③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면서 그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주주가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받는 대가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주주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

【문14】 다음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乙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甲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乙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대표이사와 乙 회사 사이에서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②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기거래는 유효하다.
③ 회사는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라는 사실 및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자기거래라도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유효하나, 이사회의 승인은 자기거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사후승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15】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실질적인 자본감소는 자본의 감소와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주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순자산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다.
② 명목적인 자본감소는 자본액만 줄이고 순자산을 사외로 유출시키지는 않는 무상감자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다.
③ 자본감소는 주식의 액면가를 감액하거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 없다.
④ 자본감소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주주 · 이사 · 감사 · 청산인 · 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16】 주식회사의 정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정관은 무효가 되고 회사설립의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목적사업을 '상업', '서비스업', '공업' 등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면 된다.
④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반드시 상호를 기재해야 하고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삽입해야 한다.

【문17】 상법상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데 비하여, 합자회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과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없고 출자의무를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다.
② 합명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원이 될 자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 2인 이상과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③ 합명회사는 정관에 사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이를 등기해야 하며, 합자회사는 정관에 위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고 이를 등기해야 한다.
④ 합명회사의 사원은 금전이나 현물 외에 노무나 신용도 출자할 수 있으나,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문18】 상법상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사 설립시 그에 관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③ 판례는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자기가 가지는 대표권의 행사를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④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문19】 상법상 위탁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저가로 매수한 경우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을 공탁 또는 경매할 수 있다.

【문20】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사채(社債)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보고 있다.
② 상법상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
④ 판례는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상법상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문21】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에서 표결한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서 의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②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해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정관에 서면투표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22】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 및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③ 감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한다.
④ 감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문23】 상법상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라도,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④ 판례는 주식회사의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않는다고 보고 있다.

【문24】 다음 중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주가하락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반드시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③ 상법상 액면미달의 발행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가능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25】 다음 상인·상행위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상법상 상인이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행위로 보는 이른바 '절대적 상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영업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소정의 행위는 상행위이나, 영업으로 하더라도 그 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④ 변호사도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25문】

【문 1】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의 확정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중간처분등기
③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등기
④ 원고의 승소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 당해 예고등기

【문 2】 건물의 멸실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은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한 건물의 멸실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④ 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이나 부존재의 뜻을 적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문 3】 다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부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회생절차에 관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부인의 소의 제기를 이유로 수소법원이 예고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부인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회생절차에서 부인의 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는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문 4】 다음은 거래가액을 함께 등기하여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등기원인이 매매라면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② 등기원인증서가 2006. 1. 1. 이후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③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분양계약서와 함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고,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만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④ 피분양자의 지위가 여러 번 매매로 이전된 경우로서 각 지위이전계약이 모두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서에 여러 개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문 5】 가등기의무자 및 가등기권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 및 예규에 의함)

① 가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가 있더라도 본등기의무자는 종전소유자이나,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제3취득자이고, 종전 소유자가 아니다.
②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두 사람의 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이 가등기상 권리를 다른 가등기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한 가등기권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6】 다음 중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어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법인등기부에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은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지 않고서도 청산법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청산인은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청산인 등기가 되지 않은 채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한다.

【문 7】 집합건물 등기기록의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②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과 면적
③ 대지권의 비율
④ 등기연월일

【문 8】 외국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인감증명의 날인 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②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④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아직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은 자는 외국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 9】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순위 1번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으로 설정한 지상권자로부터는 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관한 승낙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하려면 분할절차를 밟은 후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려 할 때 등기의무자는 부기등기명의인이고, 이때 말소할 등기는 부기등기상의 표시가 아닌 주등기상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갑,을,병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문10】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공문서 또는 공정증서이어야 한다.
③ 가압류결정정본이나 등기부등본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및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한다.

【문11】 다음 중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①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와 환매특약의 등기
②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
③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 만에 관한 소유권보존의 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④ 수증자가 여러 사람인 포괄유증에 있어서 각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문12】 다음 중 부동산등기법상 토지 합필등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는?

① 지상권설정등기 ② 임차권설정등기
③ 경매개시결정등기 ④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설정등기

【문13】 다음 중 자연인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등기원인으로 옳은 것은?

① 사인증여 ② 취득시효완성
③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④ 공유물 분할

【문14】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등기예규에 의함)

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취하요청이 있으면 등기신청 취하를 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③ 등기신청의 취하시 등기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를 반환한다.
④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라도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문15】 미등기 건물의 직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으로 건물에 관한 직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처분제한의 등기를 말소할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압류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문16】 다음 중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공용부분의 등기)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붙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미등기인 건물에 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용부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공용부분의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에 소유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공용부분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용부분의 등기의 말소등기는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문17】 다음은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등기예규에 의함)

①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
②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기재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을 “서울”, “부산” 등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경기”, “충남” 등으로 약기한다.
③ 부동산 소재지 표시를 할 때에는 지번의 경우에 “번지”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한다.
④ 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11년 3월 12일”과 같이 기재한다.

【문18】 다음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첨부서면상 등기명의인이 개명으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이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이후 가압류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압류권리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중간의 변동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최종 주소지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어도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9】 전세권설정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농경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② 전세금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③ 전세권설정시 특약사항으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대를 허용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전세권설정등기 후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다음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이 없는 한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문20】 다음의 등기신청 중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①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문21】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없는 등기는?
①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② 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등기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하여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문2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사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인감증명서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한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할 필요없이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여 재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자등록에 관한 해지신청을 하고 새로이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23】 다음 중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분할소송의 피고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③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등기는 할 수 없다.

【문2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등기관 갑은 00번지의 토지에 관하여 중복된 등기기록을 발견하였다.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선등기기록)에는 을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다른 등기는 없었으며,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후등기기록)에는 병이 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등기는 없었다.

① 등기관 갑은 선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본 사례와 같은 경우 등기관이 중복된 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본 사례에서 등기관 갑이 중복등기를 해소하기 전에 을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한 후 중복등기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본 사례에서 선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관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병은 선등기기록에 관하여 을을 대위해서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외관상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 있다.

【문2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병기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재외국민이 국외이주로 종전에 부여받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②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회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사용한다.
④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 그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